

KMI 동향분석

VOL.171
2020 JUNE

발간년월 2020년 6월(통권 제171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류정곤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관리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박상우 어촌어항연구실 실장
(swpark@kmi.re.kr / 051-797-4562)
강영은 어촌어항연구실 전문연구원
(yekang@kmi.re.kr / 051-797-4563)
이호림 어촌어항연구실 연구원
(holiml@kmi.re.kr / 051-797-4720)
전효주 어촌어항연구실 연구원
(thesocial@kmi.re.kr / 051-797-4564)
김은영 어촌어항연구실 연구원
(keyblue625@kmi.re.kr / 051-797-4538)
조경준 어촌어항연구실 연구인턴
(rudwms8033@kmi.re.kr / 051-797-4925)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1차적 위기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이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킴으로써 전 세계적 경제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밸류 체인(GVC) 훼손, 산업경쟁력 구도 재편의 상황, 고용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는 전례 없는 수준의 과감한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는 것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해 정부는 비대면화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본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시키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휴먼 뉴딜 토대 위에 데이터, 5G,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 공공시설의 탄소 배출 저감, 그린 리모델링, 친환경 에너지 등을 포함하는 그린 뉴딜의 3가지 방향으로 구분되며,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세부내용은 ‘5G 국가망 확산’,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 포용’, ‘도시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 등으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 어촌 환경은 이미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 그 발전 여건과 동력이 더딜 수밖에 없다.

반면, 유럽연합(EU)의 농어촌 정책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고용 창출을 포함하는 ‘디지털(Digital) 지역 정책’ 추진을 골자로 농어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혁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 정책은 농어촌 및 시장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디지털 정보 격차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보건복지 및 교육기술 디지털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일본의 디지털 지역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는 조건불리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ICT 정책을 들 수 있다. 농어촌 지역 중심 ICT 정책은 인구과소지역, 낙도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 지원과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서 소규모 학교 가상 클래스, 지역 주민 의료 정보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조업구역의 안전 및 생산성 지원을 위한 전자조업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골자로 한 유럽연합(EU), 일본의 ‘디지털 지역 정책’은 지역주민 우선, 삶의 질 향상, 경제사회 정책 및 재정의 개혁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지역 정책 도입은 인구 소멸, 어획량 감소 등 지역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어촌사회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어촌뉴딜 300과 연계하여 정책 성과와 사업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주민주도로 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지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현안과 문제해결을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어촌뉴딜이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휴먼뉴딜)과 연계하여 추진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원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수 있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사회의 레질리언스(Resilience)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 어촌뉴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판 어촌뉴딜은 ① 어촌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 혁신, ②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와 어촌다움 등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린 뉴딜로의 진화, ③ 사람 중심의 휴먼뉴딜을 접목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 방향은 스마트 어촌으로 구체화되며, 스마트 어촌의 사업 방향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인 어촌의 일터(Work), 삶터(Living), 쉼터(Rest)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 미래형 어촌사회로 대전환이 필요하다. 일터는 생산현장에서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터는 SOC 디지털화를 통해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쉼터는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와 니즈에 대응해 나가는 디지털 솔루션이 사회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다. 둘째, 유희공간(유택 및 수역) 등 어촌 입지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그린 뉴딜 통해 어촌형 주민주도의 환경에너지 자립 추진이 요구되며, 중소규모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휴먼 뉴딜 영역에서는 리빙랩(Living Lab)을 통해 어촌사회의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작창업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상 안전재해 예방을 통해 어업인력 손실 방지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디지털·그린·휴먼뉴딜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

■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분야 구조적 변화로 비대면화(Untact)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로 촉발된 ‘거리두기’는 우리 생활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켜 비대면 및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최근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 교육, 비대면 의료, 원격 근무 등 비대면 활동 속도와 범위가 급속히 증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축적·활용 인프라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대한 수요도 크게 확대됨

표 1.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

변화 요인		내용
비대면 선호		‘나홀로’ 가속화 :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개념 강화
		비대면화(Untact 서비스): 무인화·자동화
디지털화 강화	전체	디지털 업무 환경에 대한 투자 강화
	금융	핀테크, 비대면 고객서비스 강화
	IT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 및 IT 서비스업 확산
	유통	오프라인 ⇒ 온라인으로 채널 재편 가속화
	외식	오프라인 식당 불황, 배달음식 확산, 공유주방 증가
	레저	다중 밀집사업(찜질방, 영화관 등) 사양화 ⇒ 생존을 위해 1인실, 분리 공간 등으로 변신
	제조	무인화에 대한 긍정적 시각 강화 (기존: 인건비 절감 ⇒ 향후 : 질병에 대한 안전망)
소비행태의 온라인화		오프라인 대형 업체들의 부진 : 4060세대 소비 온라인화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 업체의 하청업체화 및 플랫폼 노동자의 급증
		오프라인 업체들의 온라인 연계 강화
		온라인 자영업자의 증가
기업의 스마트워크 추진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
		근무장소 다양화 (스마트워크센터 확충, 재택근무, 원격근무 확대)

자료 : 삼일회계법인, 코로나19가 가져올 구조적 변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2020. pp.1~3 참고해 저자가 재구성

■ 디지털 뉴딜의 성공으로 미래경제의 주도권 확보, 생산성 향상, 좋은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견인

- 우리나라는 지난 60년 간 압축성장을 통해 2018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였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향후 10년 내에 1인당 국민총소득이 4만 달러에 진입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하지만 재무적·기술적·인적 자원 부족으로 자체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지역과 중소기업은 기술 진보를 따라가지 못해 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고령화, 초저출산 문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되어 2001년 잠재성장률은 5.0%에서 2020년 2.5% 수준으로 빠르게 하락¹⁾, 소득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짐
- 따라서 국민소득 4만 달러로의 도약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핵심기술을 융합한 생산성 혁신이 전제되어야 하며, 도약에 성공한 독일과 실패한 일본의 큰 차이점은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변화와 혁신에 정부의 뒷받침 여부에 있음
- 한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자동화 및 로봇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일부 시각도 있지만, 오히려 기술혁신을 통해 좋은 일자리 확대 및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됨
- 일례로 독일 인터스트리 4.0 분석 결과, 61만 개의 현장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디지털 기술 활용, 엔지니어링, 데이터분석 등과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 96만 개가 창출됨²⁾
- 또한 산업의 스마트화는 노동시간·안전사고 감소, 생산성·업무효율 증대, 임금 상승 등으로 이어져 근로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업무효율성 제고, 장애인과 일반인의 생산성 격차 감소, 제조업에서의 여성 노동력 활용 증대, 남녀 간 임금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시장 창출, 디지털 기술 결합,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혁신), 그린(지속가능), 휴먼(사람우선·포용)을 포함한 전환적 뉴딜이 이 난국을 타개할 핵심 열쇠로 인식하고 있음

■ 그린뉴딜과 휴먼뉴딜은 디지털뉴딜의 성공을 위한 핵심동력

- 그린뉴딜과 휴먼뉴딜은 디지털뉴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지 않았으나,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가치사슬과 화석연료 공급망은 불안정해졌으나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전세계 대기오염 수준은 눈에 띄게 개선³⁾되었고, 유럽, 미국, 영국 등지에서 천식과 같

1) 경향신문, “빨라진 잠재성장률 하향세...저출산·고령화 등 구조문제 심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9091514001) (접속일 : 2020.06.10.)

2) 노규성, 디지털 뉴딜, B&Comms, 2020. p.73

3)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역설...확산 심각한 대도시 대기질 개선(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4065751075>) (접

은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이산화질소(NO₂) 배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60% 감소하였음

- 이로써 포스트 코로나시대는 인간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그린뉴딜을 통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 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환경적 편익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임
- 정부는 3020E이행계획에 따라 2017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포하였고, 2020년 5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15%로 늘리고, 분산전원 발전 비중도 22%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태양광·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한국전력 등 전력공기업과 연계한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임⁴⁾
- 휴먼뉴딜은 사람중심의 포용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며 디지털뉴딜로 인한 노동배제 사회의 도래를 방지하고 노동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함⁵⁾
- 휴먼뉴딜은 인재 역량 강화를 통해서 디지털·그린 뉴딜의 전환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구조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⁶⁾

그림 1. 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의 연관관계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환적 뉴딜 T/F, 「전환적 뉴딜」 정책 제안, 2019. p.5

속일 : 2020.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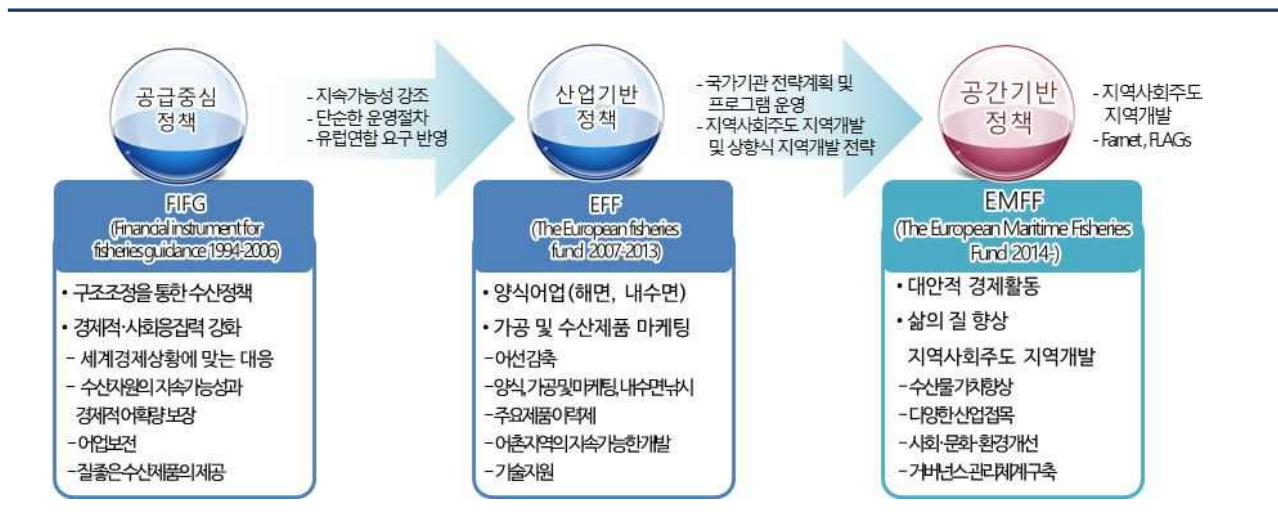
- 4) 연합뉴스, "17개 시도,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5%로 확대",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327>) (접속일 : 2020.06.10.)
-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환적 뉴딜 T/F, 「전환적 뉴딜」 정책 제안, 2019
- 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환적 뉴딜 T/F, 디지털 뉴딜의 개념과 추진전략, 2019

EU, 수요맞춤형 농어촌정책 추진과정에 '디지털 전환' 초집중

■ 유럽연합(EU), 공간과 사람 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수요맞춤형 정책 강화

- 유럽(EU)은 1990년 공급·산업기반 중심의 농어촌 개발 추진에서 겪은 문제점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어촌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해 어촌의 지속가능성, 경제성, 산업의 다양성, 생활환경의 개선, 체계적인 거버넌스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그림 2. 유럽연합(EU) 농어촌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자료 : EU Fisheries 홈페이지 자료를 저자가 재구성(https://ec.europa.eu/fisheries/cfp_en) (접속일: 2020.06.09.)

- 유럽연합(EU) 산하 E.N.R.D(유럽지역 농어촌 개발 네트워크) 및 FARNET(어촌지역 네트워크)는 지역특성 공간기반으로 공공서비스 거점화, 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생활서비스 개선, ICTs 등을 활용한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사업(C.L.L.D,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⁷⁾과 디지털 정책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 등의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유럽은 지역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농촌개발기금(EAFRD,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유럽해양수산기금(EMFF,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등 4대 예산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신기술, 사회변화를 결합한 창의적이고 비정형화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장려하고 있음

7)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C.L.L.D: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은 농어촌공동체가 지역요구와 잠재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이끄는 상향식 개발로 지역의 혁신과, 네트워킹,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개념의 정책

■ 수요맞춤형 농어촌 정책 토대 위에 체계적인 거버넌스 및 법제도 제정

- 농어촌 개발정책의 기간(2014~2020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소통을 위한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어촌 개발정책의 설계구현을 개선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 의무를 강화함
- 유럽연합은 농어촌 개발을 위해 EU 위원회의 기관 및 네트워크를 구축, 국가기관 및 중앙정책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기관, 지역단체 등의 위계를 가지고 거버넌스를 구축함

그림 3. 유럽연합(EU) 농어촌 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자료 : ENRD 홈페이지(https://enrd.ec.europa.eu/networking/stakeholder-involvement_en) (접속일: 2020.06.09.)

- 유럽 농어촌 다양한 지역개발기금⁸⁾의 전략적 이용을 위한 법률로 「공통규정(Common Provisions Regulation(EU) No.1303/2013)」을 제정,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로 「농어촌개발규정(Rural Development Regulation(EU) No.1305/2013)」을 제정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관라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수평규칙(Horizontal Regulation(EU) No.1306/2013)」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접근하기 용이한 농어촌 개발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중심의 융복합사업으로 농어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지역을 위한 지역정책으로 공공 인프라 공급망 확대, 농어촌 사업지원, 농어촌 서비스 개선을 디지털(Digital)과 융복합하여 추진 중임

8) 농촌개발기금(EAFRD,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유럽해양수산기금(EMFF,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표 2. 농어촌 경쟁력 강화, 자원관리, 고용창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인프라 공급망 확대 (Supply Chains)	농어촌 사업지원 (Business)	농어촌 서비스 개선 (Smart Village)
(1) 농어촌 디지털접근성 강화 (2) 시장의 디지털 접근강화 (3) 기반시설 등의 현대화 (4) 새로운 시장개척 (5) 농어촌 산업의 다각화 (6)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	(1) 유연한 사업지원 서비스 제공 (2) 디지털(정보) 격차 극복 (3) 지역개발 프로그램 측정 배포	(1) 멀티서비스 허브 구축 (2) 보건/복지 서비스 (3) 교육/기술 디지털화 (4) 교통/운반 서비스 (5) 에너지지립 (6) 디지털 생태계 구축

자료 : ENRD 홈페이지 자료⁹⁾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접속일 : 2020.06.09.)

- 농어촌 지역의 유무선인터넷서비스, 온라인 마켓 플랫폼, 어선현대화, 스마트 어항 및 양식장 구축, 생산·가공·판매의 융복합, 생활SOC 구축 등 디지털 기초인프라 공급망 확대 통해 스마트하고 경쟁력 있는 농어촌 사회를 실현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학습, 멘토링, 교육 등 역량강화, 유연한 금융지원 등 지속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플랫폼(Digital Hub) 구축 및 지역공동체 현황을 진단하는 측정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농어촌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은행, 우체국 등 공공서비스와 원격근무지의 복합화, 홈케어 및 재가노인서비스, 히치하이킹 등 공유교통 및 과소지역 택배서비스, 소수력 발전 및 재생에너지 도입, 온라인 지역상품 배송 및 전자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농어촌 서비스 개선하고 있음

■ 디지털 지역정책, 감염병 위기로 농어촌 현안 문제 깊숙이 파고들어

-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상품 홍보 및 고객응대, 가상투어, 온라인 주문판매, 온라인 구인구직,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 실시하고 있음

9) ENRD 홈페이지 자료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publi-eafrd-brochure-02-en_2016.pdf,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tg_rural-businesses_summary-factsheet.pdf,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enrd_publications/publi-eafrd-brochure-07-en_2018-0.pdf)(접속일: 2020.06.09.)

그림 4.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 산업·사회의 긴급대처방법

농어촌지역 드라이브인 서비스	농수산물 온라인 플랫폼	농어업 온라인 기술교육
		

자료 : (좌)벨기에 RTC Tele LIEGE¹⁰⁾, (중)스페인 RURALgustos¹¹⁾, (우)ENRD 홈페이지¹²⁾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접속일: 2020.06.09.)

- 농어촌지역의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온라인 선 구매 후 드라이브 인 서비스로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는 등 지역혁신 서비스를 도입되어 농어촌의 생활서비스가 개선되고 있음
- 생산된 농수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어촌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의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 훈련 등을 위한 온라인 강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농어촌 교육기술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회채널 구축, 중간조직 서비스 지원, 농어촌 지역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그림 5. 농어촌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실질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재능기부 은행	행정절차의 통합간소화	농어촌 가상체험교육서비스
		

자료 : (좌)벨기에 A 'talent bank'¹³⁾, (중)스페인 RURALgustos¹⁴⁾, (우)Veneto (IT)¹⁵⁾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접속일: 2020.06.09.)

10) 벨기에 RTC Tele LIEGE (https://www.rtc.be/video/info/coronavirus/le-drive-in-de-produits-locaux-est-un-succes_1505259_325.html#gsc.tab=0)(접속일 : 2020.06.09.)

11) 스페인 RURALgustos (<https://ruralgustos.ro/>) (접속일 : 2020.06.09.)

12) ENRD 홈페이지 (https://enrd.ec.europa.eu/sites/enrd/files/enrd_publications/publi-eafnd-brochure-07-en_2018-0.pdf) (접속일 : 2020.06.09.)

13) 벨기에 A 'talent bank' (<https://talentbank.be/>)(접속일 : 2020.06.09.)

14) ENRD 홈페이지 (<https://enrd.ec.europa.eu/>)(접속일 : 2020.06.09.)

15) Veneto (IT), (<https://www.ripartiveneto.it/fase-2-veneto-fattorie-didattiche/>) (접속일 : 2020.06.09.)

- 농어촌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재능기부 은행을 개설, 농어촌 지역 사회와 재능기부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지역 활동을 개선하고 있음
- 농어촌 지역실행그룹(Lags&Flags) 사업에 대한 원격작업 및 온라인 문서 사용 등 행정절차 통합·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역 간 연결통합을 실시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 및 공공시설이 폐쇄되어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소규모 농어촌 체험교육을 시도하고, 온라인 교육 등 가상체험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

■ 일본,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ICT 정책 추진으로 위기에 직면한 낙후·소외지역에 대응

- 일본 총무성은 2013년부터 농어촌마을의 생활환경, 마을발전, 초고령화 등 농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CT정책을 도입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ICT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① 지역주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향상·확충, ② ICT를 활용한 마을 만들기, ③ 행정업무개선과 정보보안 강화를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음
- 편리한 전자창구, 공공시설 예약시스템 도입, ICT 교육추진, 행정 정보 오픈 데이터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원격 의료 모델, 아동 지키미 서비스, 지역고용 안전화 서비스 등 정책을 도입하여 안전한 심하는 마을 만들기, 방재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지방행정분야에서 전자문서 처리, 전화설문조사 연구, 교무지원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업무개선과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 일본 농어촌 ICT 정책(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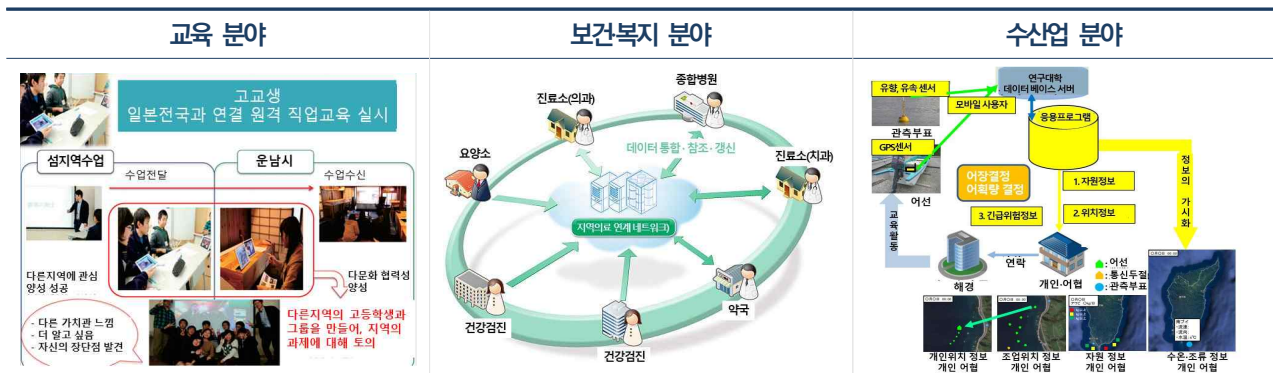
ICT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화 전략)	지역정보 기반의 정비촉진 (지리적 디지털 격차 해소)	전자 지방자치단체 추진 (AI·Cloud 도입)
(1) 지역정보화 전문가 파견 (2) ICT 지역활성화 데스크&포탈설치 (3) ICT 정보화 교육실시 (4) IoT 활용한 농산어촌 사례 제공	(1) 무선시스템 보급 (2) 방송 네트워크 정비지원 (3) 지역 데이터 센터 서비스 지원 (4) 재해정보공유시스템 보급	(1) 지자체 행정서비스 AI 공동개발 추진 (2) 지자체 클라우드 도입 (3) 지역정보화 추진 위한 지방재정 조치

자료 : 일본 총무성, 2020년도 지역정보 통신진흥관련 시책 내용을 저자가 정리

■ 일본은 조건불리지역(인구과소지역, 낙도지역)에 ICT를 활용한 정책으로 지역활력 모색

- 일본은 인구과소지역, 낙도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환경·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의료, 경제활동개선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다양한 디지털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림 6. 조건불리지역의 분야별 ICT 사업



자료 : (좌)소규모 학교 집합체 가상 클래스¹⁶⁾, (중)사도 지역 의료 제휴 네트워크¹⁷⁾, (우)오쿠시리초의 ICT어업을 활용한 자원공유 구현 사업¹⁸⁾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접속일: 2020.06.09.)

- 인구과소나도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 가상 클래스(클라우드 원격 수업시스템)를 도입하고, 중·고등학교 정규과정 수업을 중심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있음
- 조건불리지역의 이탈방지를 위해 최소한 무상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영어수학 및 예술문화 등에 대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음
- 조건불리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지역에 필요한 직업군에 대해 원격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재로 양성하고 있음
- 인구과소지역에 거주민의 의료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의료정보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함
- 홋카이도 하코다테 수산업 분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어선에 전자조업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사선 수치 및 기상관측 데이터 수집, 조업구역의 수산물 위생안전과 생산량을 측정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위기를 기회로 전환, 한국판 뉴딜에 농어촌정책 추가해야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책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 정부는 ICT 등 디지털 경쟁 우위에 기반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함

16) 소규모 학교 집합체 가상 클래스 (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top/local_support/ict/jirei/2017_044.html) (접속일 : 2020.06.09.)

17) 사도 지역 의료 제휴 네트워크(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top/local_support/ict/jirei/2017_002.html) (접속일 : 2020.06.09.)

18) 오쿠시리초의 ICT어업을 활용한 자원공유 구현 사업(https://www.soumu.go.jp/main_sosiki/joho_tsusin/top/local_support/ict/jirei/2017_023.html)(접속일 : 2020.06.09.)

- 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투자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 시너지 효과와 크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 경제전반의 혁신 확산 및 생산성,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임¹⁹⁾

■ 한국판 뉴딜은 휴먼뉴딜 토대 위에 디지털·그린 뉴딜 등 2개의 축으로 추진

-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전망 토대 위에 데이터·5G·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의 탄소 배출을 없애는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뉴딜의 축으로 추진되는 구조로 7개 분야 총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표 4.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세부 내용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1. D.N.A. 생태계 강화	① 의료·교통 등 국민생활 밀착형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②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③ 1·2·3차 전산업 5G·AI 융합 확산 ④ AI·SW 핵심인재 10만명 양성	5.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①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제로 에너지화 전면 전환 ②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 추진 ③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2.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①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wifi 구축 ② K-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6.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①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및 5대 선도 녹색산업 육성 ② 주력 제조업 녹색전환을 위한 저탄소·녹색산업 조성
3. 비대면 산업육성	① 전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 ②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온라인교육 강화 ③ 감염병 안심 비대면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 구축 ④ 중소기업 16만개 대상 원격근무 인프라 보급	7.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①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 ②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 에너지확산 기반 구축 ③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
4. SOC 디지털화	① 4대 핵심시설 디지털관리체계 구축 ②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		
휴먼 뉴딜(고용안전망 강화)			
①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②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③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체계로 개편		④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⑤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자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6차 비상경제회의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0.6.1.) p.55

1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2020.5.7.) p.2

- 동 정책은 1단계 사업(디지털뉴딜 13.4조원, 그린뉴딜 12.9조원, 공공안전망 강화 5조원 등)에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31.3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하고, 2단계(2023~2025년)는 약 45조원을 투입할 예정임²⁰⁾

■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분야를 포함하여 한국판 뉴딜 추진 필요

-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어 농산어촌 분야를 소관하는 부처는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추구하는 저탄소,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젊은 계층의 이탈, 고령화로 지역침체가 심화되고 입지적 여건이 열악한 어촌지역에도 도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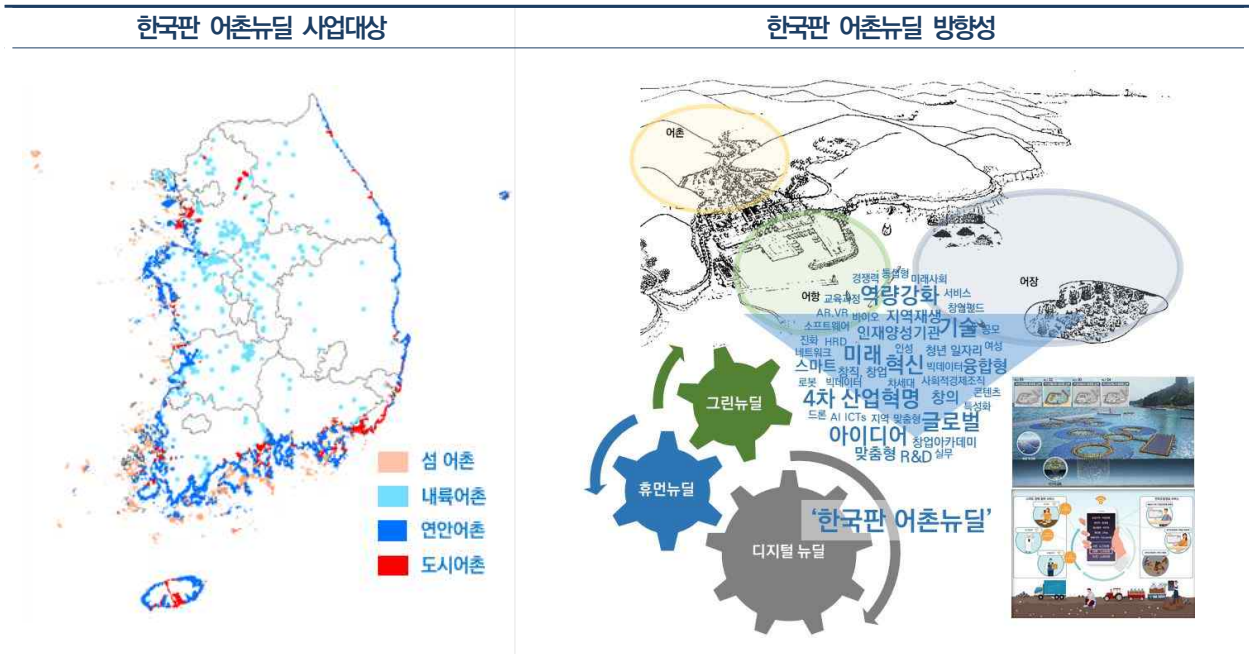
포스트 어촌뉴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판 어촌뉴딜로 전환해야

■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포용과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국판 어촌뉴딜’로 전환 필요

-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협업체를 중심으로 상향식(Bottom-up)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어촌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함
- 연안어촌, 섬 등 국토 외곽지역의 지역소멸 위기와 도시어촌, 내륙어촌(강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지유형과 지역쇠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발수요를 확보하고, ‘포용과 혁신’의 한국판 어촌뉴딜로 전환함으로써 바다와 내륙을 잇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함
- 특히, 한국판 어촌뉴딜은 쇠퇴하는 지역과 사람중심의 ‘포용’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첨단 기술과 작업환경 기반의 ‘혁신’의 가치를 표방함

20) 제6차 비상경제회의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0.6.1.) p.55

그림 9. 한국판 어촌뉴딜 사업대상 및 방향성



자료 : 저자 작성

■ 어촌지역의 일터·삶터·쉼터에 누적된 사회문제 해결 우선되어야

- 어촌사회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와 공동화에 따른 낮은 삶의 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토의 가장 외곽지역인 어촌에서 가장 빠르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어업생산기반인 어선과 어항, 양식시설 등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업인 맞춤형 예방을 위한 기술과 사회혁신이 필요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도입되면서 어촌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어촌사회의 삶의 질 여건은 인구과소, 국토의 최외곽에 입지하는 등 환경적 불리성으로 생활 SOC 해상교통과 어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거점화된 복합형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문화여가, 보건복지 등 취약한 영역의 삶의 질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혁신이 필요함
- 어촌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는 점은 해상교통과 비싼 여객선 비용이었고, 특히 어촌지역 자원과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해결해 나가야 함

표 5. 어촌의 누적된 사회문제와 개선방향

구분		어촌 사회문제	혁신요소
작업환경 및 일하는 방식	작업환경 및 어업인력	•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 반복작업, 연속 노동시간 8.02h	• 고령자친화형 작업환경 조성 (노동부하 저감형)
		• 귀어귀촌 등 신규인력 유입 한계 ※ 평균 기술습득 2.1년 소요	• 누구에게나 손쉬운 어업환경 마련 (기술습득 용이, 손쉬운 조작)
		•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종사자 증가 (원활한 의사소통 어려움)	• 다국적 문화언어 소통 필요
	업무상 안전재해	• 높은 재해율(5.56%), 어업인력 손실	• 사고발생 시 조난위차별신 시스템
		• 열악한 작업환경, 기계환경적 요인에 기인함	• 작업환경 안전사고방지 체계 마련
	생산통계	• 부정확한 생산통계에 따른 문제	• 실시간 전자조업보고 체계 마련
환경에 대응하는 방식	자연재해 예방대응	• 자연재해에 따른 어촌사회 피해 발생 - 고수온 피해 : 매년 피해 증가 예상	• 자연재해에 대한 실시간 피해영향조사 시스템 마련
	어장 환경관리	• 해양쓰레기, 생활오수 방류 등 어장환경관리 어려움	• 양식어장 원격 환경관리 모니터링 구축 (고·저수온, 적조, 환경위해요소 등)
	에너지	• 어업용 경유 사용량 ('16) 841,617kℓ • 어가 전력 ('16) 6,776kW	• 어촌 에너지 자립체계 마련 (스마트 그리드, ESS, 자립률 관리)
삶의 질 여건	지역소멸 고령사회	• 어촌 지역소멸지수(0.303) • 고령화율 ('19) 35.9% • 1인 가구 ('15) 9,220가구(16.8%)	• 고령자친화형 정주환경 조성 • 단독가구 생활안심 서비스
	삶의 질 제고	• 어촌사회 취약한 삶의 질 영역 (교육, 문화여가, 보간복지 등)	• 어촌형 스마트 생활 SOC
어촌의 국민적 니즈	어촌관광	• 어촌 정보 부족 (먹거리, 숙박, 체험, 특산물 등)	• 무선인터넷 고도화 • 어촌관광지 비콘 서비스
		• 어촌관광 편의 인프라 부족	• 어촌통합형 모바일 플랫폼 구축

자료 : 박상우 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어촌 구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pp.105~106.

‘스마트 어촌’으로 포용과 혁신의 한국판 어촌뉴딜 구현

■ 전통적인 어촌의 일터(Work), 삶터(Living), 쉼터(Rest)가 미래형 어촌사회로 대전환

- 스마트 어촌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요소인 비대면(Untact)과 4차 산업혁명 기술(Data, 로봇, AI 등)을 적용해 일터(Work), 삶터(Living), 쉼터(Rest)에서 나타났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넘어 미래형 어촌사회를 구현
- 일터(Work)는 어항과 어장(마을어업, 양식어업, 연근해어업) 등 생산현장에서 누적된 생산성 감소, 안전사고, 업무 효율성 저하, 인력문제(고령화·공동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해소
- 삶터(Living)는 국토의 가장 외곽지역에 입지적 특성 및 열악한 생활 SOC여건과 교육, 의료, 문화여가, 정주생활기반(교통, 주거) 등 낮은 삶의 질 문제를 해결
- 쉼터(Rest)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각화된 소비자 니즈에 탄력적으로 대응

표 6. 서천군 선도리의 디지털 어촌뉴딜 적용 예시

구분	현안문제 진단	스마트 솔루션
일터 (Work)	생산 후 관행적으로 중간상인 판매방식 획일화 (어장위치, 생산자, 생산량 정보 부재) ※ 해양사고 시 어업활동 입증 불가	① 전자조업정보 서비스 구축 (생산관련 정보 → 어업경영체 연동) ② 소비자 참여 경매를 통한 판로다각화 및 어가 상승
	천재지변 및 비과학적 양식으로 생산성 저하	스마트 아쿠아팜 4.0을 통해 자연재해 예방 및 생산성 향상
	고령화로 마을어장 관리 어려움 ※ 마을어장 불법어업 발생(36건/年) ※ 채취 수산물 운반 어려움(고령자 중심)	⇒ 마을어장 이글아이 서비스 구축 ① CCTV(불법진입·채취 등 채증) ② 드론(바지락감태 어획물 운반, 1회 100kg)
삶터 (Living)	고령화, 생활 SOC 취약해 삶의 질 만족도 낮음 ※ 고령화율: 39.5%, 지역소멸지수: 0.313	고령자친화형 질환 및 치매예방 서비스 (스퀘어스텝운동→APP 개선효과 가족 간 정보 공유)
쉼터 (Rest)	갯벌, 바닷속 현장 직접체험(비용, 시간) 공급자 주도의 어촌해양레저 정보	IoT기반 가상 갯벌, 바닷속 체험 비콘 서비스를 통한 지역맞춤형 정보 제공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10. 일터(Work)의 한국판 뉴딜 개념 구상 예시안



자료 : 저자 작성

■ 어촌 입지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그린 뉴딜을 통해 어촌형 주민주도의 환경에너지 자립

- 어촌의 공유수면(유흡수면), 폐염전, 간척농지, 연안정비 친수공간 등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어촌형 중소규모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안정적인 소득원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어촌의 환경·입지특성을 활용하여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절감과 저장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잉여전력은 한전에 매전하여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
- 공유수면, 폐염전 등에 태양광, 풍력, 조력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어촌사회에 일부 환원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촌연금 재원 확보 등 안정적인 소득 마련
- 공동체가 스스로 부족한 주민복지(소일거리 창출, 노인돌봄, 문화활동 등)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그림 11. 삶터(Living)의 한국판 뉴딜 개념 구상 예시안



자료 : 저자 작성

■ 휴먼 뉴딜 통해 어촌사회의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작창업 기회 확대

- 한국판 어촌뉴딜은 어촌사회를 구성하는 어업공동체(수협, 어촌계), 주민, 수산산업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주민주도 방식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판 어

촌뉴딜에 대한 공론화 과정과 추진과정 전반에 걸친 역량강화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어촌사회의 부족한 역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 행정의 직접 어촌현장으로 들어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방식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과 연계된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조성, 운영·관리 영역에서 청년이 희망하는 창업·창직으로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를 통해 어촌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비용,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함
- 특히,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재해예방 교육 등을 통해 어업인력 손실을 방지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병! ,로봇·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계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질,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노동법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선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물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हित감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물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 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벙커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물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물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마-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사평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테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파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물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9.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물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초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대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상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제155호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9.11.12.
제156호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과 여객 편의성 제고 필요	2019.11.13.
제157호	해양교육 문화 진흥법 만든다.	2019.11.14.
제158호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 SCM 협력을 강화해야	2019.11.25.
제159호	디지털 연계 공동추진이 실효성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의 첫걸음	2019.11.27.
제160호	수산물식품포장,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능 고도화를 추구해 나가야	2019.11.27.
제161호	연관산업에서 수산업 미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찾아야	2019.11.28.
제162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거래 증빙자료 보관 의무 도입방향	2019.12.09.
제163호	해양수산 창업 실태 및 시사점	2019.12.27.
제164호	2019 한-아세안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과 협력과제	2019.12.30.
제165호	코로나19 사태와 해운물류산업 대응방안	2020.02.18.
제166호	이상고온으로 해조류 공급 차질 우려 수급관리체계 재정비 필요	2020.03.03.
제167호	양식산 활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수산물 구매 확대에 대비해야	2020.03.31.
제168호	해양공간계획시행법 시행 1년, 조기 정착을 위한 세부이행 방안 마련해야	2020.04.29.
제169호	코로나 19 이후 양식수산물 수급안정화, ‘입식 관리’가 우선되어야	2020.05.22.
제170호	해양수산 관점에서의 2020년 중국 ‘양회’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19 변화 흐름 감지하고 대응책 수립해야	2020.06.16.
제171호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2020.6.22.

URL: <https://www.kmi.re.kr/>